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_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

1.

오는 201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반세기의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이 해를 기념하는 어떠한 성명이나 기념행사의 개최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어쩌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전혀 없는 50주년을 각오해야 할 형편이다.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시간들을 견디고 있다.

양국 정상은 2015년에 들어서 관계 복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1월 5일, 아베 총리는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 외교의 복원과 전후(戰後) 70주년 기념 담화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뜻을 밝히고,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국가로서의 전후 국가 건설의 경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담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¹

1월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일 관계 복원의 의사를 피력했다. 2015년이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일본 측의 자세 전환이 전제가 되긴 하

1 일본 수상 관저,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105kaiken.html(최종 검색일: 2015. 2. 1).

지만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비록 공을 일본 측에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장급 회담의 추진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과거의 발언보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²

그러나 곧바로 한일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1월 21일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된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이 국방부에 배포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즉각 항의하지 못하고 누장 대응했다는 뉴스가 한일 관계를 다시 경색 국면으로 만들었다.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과 4월에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가 발표되고,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가 예정되어 있어, 올해 상반기에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첩첩산중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정이다. 한일 관계가 어정쩡하게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서 6월을 맞이하게 되면, 국교 수립 50주년에 대한 일본 측의 평가는 저조할 수밖에 없고, 8월의 종전(終戰) 70주년 담화는 그러한 저조한 평가 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그 의미를 축소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수교 50년의 한일 관계는 ‘최악의 깊이’를 경신하며’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돌이켜 보면, 한일 국교정상화 10주기의 역사는 ‘한일 관계 최악의 경신’의 역사였다. 10년 전인 2005년 한일 관계 40주년에도 한일 관계는 전 분야에서 ‘르네상스’를 맞은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에 직면해 있었다. 그해 3월, 독도 및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교정상화 40년의 해는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지나가고 있”었다. “한일 관계가 수교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어디에서도 기념식도 없이 마흔 번째 생일상을 맞게 된 것”이었다.³ 국교정상화 40년을 맞이한 2005년, 한일 관계는 ‘명암’과 ‘애증’의 40년으로 표현되었다.

2 『조선일보』, 2015. 1. 13. 「한일 정상회담 어려움 있어 ... 일의 자세 전환 중요」.

3 『연합뉴스』, 2005. 6. 21.

1995년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은 어떤가? 그해 여름 한일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백지화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마저도 10월에는 ‘한일합방이 합법’이라는 종래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청장관 등 잇따른 각료들의 망언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 그 여파로 고노 외상의 방한도 중단되었다. 일본 외무성의 평가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사태’라는 것이었다. 12월 18일은 양국이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한 날인데, 1995년 12월 19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이날을 보도하고 있다. “한일 두 나라가 국교 관계에 들어간 지 꼭 30주년이 되는 날,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이날을 축하하는 행사는 없었고, 의미를 평가하고 미래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편한 마음으로 수교 기념일을 맞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다.⁴

1985년의 20주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10주기의 역사에서 보면 예외적인 해였다. 한일 관계는 ‘신기원’, ‘새 동반자 시대’, ‘전린의 신시대’ 등으로 표현되는 밀월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전인 1975년의 10주년은 1974년의 위기를 겨우 넘긴 상태에서 맞이했다. 한일 관계는 1973년 8월의 김대중 납치사건과 1974년 8월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을 거치면서 한일 양국에서는 ‘단교’ 주장까지 나오며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가 1975년에 들어 ‘베트남 적화’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는 겨우 봉합되었던 것이다. 1985년을 예외로 하면,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로부터 10주기마다 최악의 위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4 『동아일보』, 1995. 12. 19.

2.

수교 50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비평』 제12호는 한일 수교 50년을 기념하는 특집으로 꾸며졌다. 다들 주제가 50주년을 구가할 정도의 외교관계라면 조금 더 밝은 기조로 엮어도 좋았으리라. 그러나 이번 호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한일 관계가 갈등의 심연에 빠져 있는 데다, 여간해서 그 어둠의 끝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기획을 하고 글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한일 관계 50년은 갈등의 역사 만큼이나 협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일교섭의 전선에서 활약해 온 한 외교관이 한일 관계 50주년을 결산하며 저술한 책의 제목이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인 것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 온 한일 수교 50주년의 역사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⁵ 그러나 한일 간의 갈등과 협력은 단순 반복을 거듭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잡한 진화의 경로를 지나왔다는 것이 『일본비평』 제12호를 꾸리는 편집위원들의 입장이다.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던 한일 양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방과의 갈등과 견제보다 협력과 연대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됐고, 이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창출해 왔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창출은 특별한 우정 없이도 자연 상태에서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협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액설로드의 ‘협력의 진화’가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 사례다.⁶ 그런데 한일 관계의 예외성은, 갈등도 따라서 진화했다는 데 있다. 즉 갈등은 복잡화하여, 외상(外傷)이 내상(內傷)을 유발하는 ‘복합골절’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⁷ 복합골절이란 골 조직의 파괴로 근처의 혈관이나 신경 근육 내장 등이 손상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한일 관계는 갈등의 복잡화와 협력의 진화가 동시진행하는 역사를

5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6 로버트 액설로드, 『진화된 협력: 이기적 개인의 티포택 전략』, 이정식 옮김, 시스템아, 2009.

7 『중앙일보』, 2014. 5. 2. 「(특별대담) 송호근 문고 오코노기 답하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586348&cloc=olink%7Carticle%7Cdefault (최종 검색일: 2015. 2. 1).

걸어왔고, 그러한 모습이 보다 더 뚜렷이 인식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비평』 제12호의 필자들은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이러한 한일 관계의 양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한일 관계의 기조는 협력에 있다거나, 아니면 결국엔 갈등에 무게가 있다거나 하여, 어느 일방의 우세로 한일 관계를 분석·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들은 혹시 불평할 수 있다. 한일 관계의 기조와 전망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중도에 있고, 올바른 전망은 중용에서 나오듯이, 한일 관계는 갈등과 협조를 반복하며 진화해 온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다. 이렇듯 악화와 정상화를 반복하는 한일 관계를 관찰해 온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항구적 뉴 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정상상태’로 보고, 이러한 한일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게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잘 기념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⁸

‘협력과 갈등’의 동시 진화는, 1965년 체제가 안고 있는 20세기판 ‘편의로운 오해’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의로운 오해’란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왜’가 한편으로는 관념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우월을 서로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묵인하고 관계를 회복했던 것을 포착하는 개념이다.⁹ 조선과 ‘왜’의 교린외교에 가시처럼 걸려 있던 ‘편의로운 오해’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과거의 조약들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가 되었다는 애매한 말로 처리되었을 때 부활했다. 그것은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과 경제 협력이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편의로운 오해’의 관계를 끝장내자고 한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자 그룹에서는 한

8 빅터 차, 「(세상읽기) 한일관계에 대한 네 가지 이론」, 『중앙일보』, 2015. 1. 30. <http://joongang.joins.com/article/805/17055805.html>(최종 검색일: 2015. 2. 1).

9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동아시아 근현대사 논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44~45쪽.

일협정 개정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 협정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배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신한일협정’에서는 청구권협정의 제3조를 개정하여,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¹⁰

한편 ‘편의로운 오해’가 협력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한일 관계는 ‘편의로운 오해’에서 출발했으나, 이후의 과정은 ‘오해’를 불식시켜 온 역사로서 평가하자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은 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되는 역사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진화해 온 것이므로, 오히려 그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진화의 구체적인 궤적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등의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나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10년의 강제병합 100년에 대한 간 나오토 담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진화를 일구어낸 것은 민주화를 계기로 성장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이기에 1965년 체제의 진화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화를 배경으로 추진되어 획득한 한국 측의 외교적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 50년의 역사를 수치로 확인해 보자. 내역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숫자의 증가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4천5백만 달러에서 397억 달러로 880배, 1억 7천만 달러에서 683억 달러로 400배, 50만 달러에서 45억 4천만 달러로 9,080배, 0에서 62억 1천만 달러로 무한대, 1만 7천 명에서 230만 명으로 135배, 5천 명에서 350만 명으로 700배 등.

이상은 1965년에서 2015년까지의 50년 동안의 한일 관계를 계량화해

10 인터넷 『매일경제』, 2014. 12. 3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84811> (최종 검색일: 2015. 2. 1).

11 인터넷 『서울신문』, 2015. 1. 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01006004> (최종 검색일: 2015. 2. 1).

서 나타낸 수치들이다.¹² 한국의 대일 수출은 880배, 대일 수입은 400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9,080배,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측정 불가의 증가를 보였으며, 방일 한국인의 수는 135배, 방한 일본인의 수는 700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일 간의 교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전을 이룩해 왔던 것이다. 수치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추동한 질적 변화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한일 양국에서 그 의미가 평가절하되고 말았지만,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직후 한국 국민이 보인 일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양국 사이에 국민적 수준의 ‘우의’가 생겨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복잡화와 협력의 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배경이자 결과인 것이다.

3.

이하 특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5년 체제에 기반한 한일 관계의 총괄과 제언을 듣고자 한다(천자현 논문). 다음으로 1965년의 협정에 기원을 두고 그로부터 발전되어 나오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여 변용되고 있는 1965년 체제의 모습을 세 가지 현안들을 통해 드러내려는 노력들이다. 이른바 청구권협정(니시노 준야 논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협정(유혁수 논문), 한일어업협정(조윤수 논문)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국교정상화 이래 50년의 한일 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분야별로 확인하고 총괄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역사의 논리’를 대체하여 수교의 이유가 되었던 안보(박영준 논문)와 경제(윤대엽 논문)의 논리는 이후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 전개의 배경이 되었던 정치네트

12 거의 모든 분야에서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최고 수치들은 모두 2012년의 기록들이다(한국의 대일 투자 액수는 2014년). 한국무역협회, JETRO,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일본 법무성,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홈페이지 참조.

워크의 전개(박철희 논문)와 일본 정치 연구의 한국적 전개(남기정 논문)에 대해 개관하고 그 의미를 확인해 볼 것이다.

먼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천자현의 글,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는 이 기획의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글이다. 천자현은 한일 간 갈등관계의 해소가 ‘역사 청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갈 때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그것은 한일 관계를 양국의 특수한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해결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가능할 것인데,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이른바 ‘회복적 정의’라 일컬어지는 개념으로 구성되는 관점이다. 다만 천자현도, 한일 관계의 특수한 역사를 완전히 사상하는 것은 보편적 관점에 선 해결을 공허하게 할 수 있기에 회복적 정의에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최소주의적 접근’의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 최소주의적 접근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천자현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 해결이 ‘화해’를 지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시민사회에서의 노력과 일본 정부의 불충분한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과거사 처리의 국제적 전범(典範)으로 종종 거론되는 독일 사례에서도 그 역사와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때, 한일 간의 과거사 처리는 독일의 사례에서 이루지 못한 새로운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최소주의적 접근’을 통한 회복적 정의의 실현 이후를 구상하고 이에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담당할 차세대를 위해 한일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필자의 결론이다.

일본 게이오대학의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교수는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일 양국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제도화란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 실시를 위한 한일 간의 경험 관련 협의체 및 네트

워크 형성을 뜻한다. 니시노가 우선 주목한 것은 한일 정기각료회의와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의 같은 정치·경제계의 고위급 협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정치가들과 경제계의 리더들은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공유했던 것은 상호 이익을 매개로 협력이 창출된다는 생각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익이 창출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이익이 있으니까 협력한다는 것보다는 협력하니까 이익이 생긴다는 계산이었다. 나아가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급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관련 지식과 노하우, 즉 이익 창출의 기술들이 전수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일 간의 다양한 협의체의 형성과 이들을 통한 경제 협력의 협의과정은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니시노는 이에 주목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금 및 기술의 일방적인 이전이라는 측면과는 또 다른, 한일 간의 쌍방향적 협의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던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동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은 ‘협력의 진화’를 가져 온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게 해 준다. 또한 이 글은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조망하고 있어서, 정치적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는 박철희의 글과 쌍을 이루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에 재직하는 유혁수 교수의 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1991년 합의각서’의 채택 이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고, 그 후에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 ‘1991년 합의각서’와 그에 따라 제정된 입관특별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후손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서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고 퇴거 강제 요건을 완화하며, 재입국허가의 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하지만 이는 재일동포 사회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의 일부만을 해결해줄 뿐이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귀화자의 숫자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는 ‘뉴커머’들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 ‘1991년 합의각서’

가 상정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일반이 갈등과 협력의 동반 진화의 양상으로 전개되듯 여기에서도 유혁수가 ‘정체성과 귀속의 부정합’이라고 부른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무국적자와 귀화인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있고, 다음으로 전문직에 진출하여 성공한 소수가 여전히 구조적 차별 속에 있는 다수를 대표·대변하는 이중적 상황이 있다. 거기에 더해 ‘올드커머’가 특별영주자로 ‘뉴커머’가 중장기 체류자로 법적 신분이 구별되면서도, 일본 사회에 뿌리 깊은 ‘국민 대 외국인’이라는 인식에서는 둘 다 외국인의 신분에 귀속되고 마는 데에서도 ‘정체성과 귀속의 부정합’은 나타난다. 그런데 유혁수도 결론에서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듯, ‘이민통합정책지수’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에서 ‘시시각각 정체성이 용해되어 가는’ 재일동포 사회가 ‘귀속과 공생’의 문제에 해답을 마련하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윤수 박사는 세 번째 현안인 한일어업협정을 다루고 있다. 조윤수는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에서 국교정상화가 바로 해양경계 획정을 의미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50년간의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을 어업 및 해양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일 해양레짐의 근간이 되어 온 것은 1965년과 1998년에 체결된 두 개의 한일어업협정이다. 두 개의 어업협정은 모두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해양법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일 모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틀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65년의 어업협정에 근간한 해양레짐을 유지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일본이, 1998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 또한 철저히 국제법에 의거한 권리주장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1998년의 시점에 와서 한일 양국이 ‘국제법과 국익의 조화’ 원칙을 내세운 것은 ‘국익의 주장’을 전면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일 양국은 교섭의 원칙으로

서 ‘국제법’의 존재에 기대기보다는 한일 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한 ‘국익의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어업협정과 북부대륙붕협정 체결과 같이 독도영유권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동해 EEZ 경계 획정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조운수에 따르면,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도 ‘잠정체제’처럼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내 존재하고 있는 불만 등 각각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일 간 해양레짐의 형성과 유지, 발전은 한일 각각의 국내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4.

국방대학원의 박영준 교수는,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동한 제1의 요인인 한일안보 관계의 형성과 변용을 다룬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양국의 안보상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지만, 그 자체가 안보협력은 아니었다. 더구나 한일 양국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은 적도 없이 국교정상화 이후 다양한 안보 관계가 진전되어 왔을 뿐이다. 다만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시기에 따라 협력적 양상이 발전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갈등을 빚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를 기본 요인으로 설정하거나,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를 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주목하는 방식의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박영준은 한국 역대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와 그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중심축으로 놓고, 그 영향 속에서 한일안보 관계가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한일안보 관계의 설정 여하에 따른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에 한국이 가장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정당히 평가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박영준에 따르면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조

국군대화, 북방정책,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 한일안보 관계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표방된 국가전략 및 외교안보정책 기조에서 한일안보 관계의 발전이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시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미화 시도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국에서 반일 내셔널리즘이 고조됨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한일안보 관계는 제도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보협력에 관해서 말하자면, 명확한 국가전략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일본론’이 안보협력의 ‘목표달성’에는 유리한, ‘수단과 목표의 불일치, 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윤대엽 박사는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안보협력과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동한 또 다른 실질적 요인인 경제 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윤대엽은 경제 협력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한일 경제관계에 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관계가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윤대엽이 지적하는 한일 간의 ‘경쟁적 의존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진화’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관계는 상호적 의존의 심화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경합 관계가 동시에 발전해왔다. 그런데 윤대엽이 밝혀내고자 했던 것은 이와 같은 경쟁적 의존관계가 순전한 경제 논리에 따른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역사인식, 발전 전략, 그리고 정책이념 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윤대엽에 따르면, 특히 한국의 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수출 주도 발전전략 이념은 내용적으로는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산업화로 귀결되었는데, 이를 통해 형성된 경합적 산업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념적 틀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때

문에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일 의존과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도 더 우선해서 해소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정책의 실시야말로 한일 경제관계의 주선율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소 비관적인 이러한 분석은, 윤대엽이 경제 협력에 관한 자유주의 시각, 즉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의식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윤대엽의 논지는 ‘경쟁적 의존관계’를 한일 간의 경제 협력에서 발전적인 추동력으로 삼으려면, 위의 낙관적인 시각을 역전시켜, 국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5.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일본연구소 소장 박철휘의 연구,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은 한일 경제네트워크에 대한 니시노 교수의 연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협력의 촉진자 내지 갈등의 중재자로서 한일 관계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치네트워크는 반공과 경제 협력을 동전의 양면으로 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심에 섰다. 박철휘의 분석에 따르면 처음에는 군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적 연계가 1970년대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점차 선으로 나아가 초당적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갔다. 탈냉전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안보 협력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협력체로서의 한일 관계가 강조되면서 중층적인 지적 교류네트워크가 정치네트워크와 병행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한일 간 경제력의 상대적 균등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한중 관계의 발전이 양자 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오면서 정치네트워크는

오히려 약화되는 위기를 맞이했다. 박철회는 1990년대부터 진행된 한일 양국에서의 정치 변동의 결과가 2000년대에 효과를 드러내면서, 한일 양국에서 보스 정치가 약화되고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한편,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갈등 조절자로서의 정치네트워크의 효용성이 점차 낮아져 존재 의의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태를 박철회는 정치네트워크의 ‘복합골절’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가 지적한 바의 한일 관계 전반의 ‘복잡골절’(複雜骨折) 상태가 이로부터 기원했다는 인식이 여기에서 보인다.¹³ 마지막으로 박철회는 당면 과제로 정치네트워크의 복원에 더해, 정치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한일 협력의 비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의 마지막 주제는 한국의 일본연구사 정리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인 남기정은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해방 후 한국의 학계가 일본연구의 역사를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떠한 과제 설정 하에서 일본연구를 진행했는지, 주로 일본 정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 책임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남기정은 우선 기존 연구사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일본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한국적 연구방법론 확립’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였는데, 이후로는 늘 새로운 문제 제기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남기정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이 이미 조선시대 일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일본에 대한 연구 분석은 조선 바깥의 세상을 주자학이라는 이념과 분리해서 실제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

13 「특별대담, 송호근 묻고 오코노기 답하다」, 『중앙일보』, 2014. 5. 2.

서는 주자학적 세계 인식과의 긴장 관계에 더해,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객관적 실체 사이의 긴장이라는 ‘이중의 긴장’이 상존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델로서의 일본론은 모델과 실체 사이의 긴장을 의식하게 되었다. 결론으로서 남기정은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본 정치 연구가 이러한 ‘이중의 과제’를 의식한 연구들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극복하려는 노력들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이 암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는 한국 정치가 한일 관계에 내포된 ‘긴장의 자각과 해소의 욕구’가 만들어낸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가 특히 정치적 관계에서 냉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본 이미지에 한국 정치가 구속되어 있는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극복하는 길로 남기정은 ‘방법으로서의 일본 정치 연구’를 들고 있다. 즉 한일 관계의 특수성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 인식의 방법으로 일본 정치 연구를 개방하는 것이다.

6.

『일본비평』의 편집위원으로서 필자는 제12호의 특별기고로 ‘해방 이후 한국의 제1세대 일본 유학생’의 한 명인 김영작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의 회고를 게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영작 명예교수는 아직 한일 간에 외교관계가 없어서 일본 유학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기에 해방 이후 최초의 일본유학생으로 도일하여 수학한 정치학자로서,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였던 ‘한말 민족주의 연구’를 비롯해, 근현대 한일 관계사,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일본 정치 연구 등의 초석을 다졌으며, 현실 정치에도 개입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원로 연구자다. 평소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동아시아 국제 정치, 일본 정치, 한일 관계와 한국 근현대사와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비평, 소감 등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후배 학자로서 그의 연구와 인생 행적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비평』 제 12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제적 인물’을 통해 한일 관계의 일 단면을 그려보자는 기획안이 나와 김영작 명예교수의 일대기를 정리해보자는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 독자들은 한 연구자의 개인사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생생한 증언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기정의 글과 함께 읽으면서 한국의 일본 연구에 초석이 놓여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이번 호의 특별서평은 신기영 오차노미즈대학 교수가 일본의 젠더 정치와 관련한 네 권의 책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로 정리해 낸 글을 신게 되었다. 신기영이 첫머리에서 지적하듯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에서도 유독 일본의 주류정치학은 젠더라는 분석 시각에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젠더연구로서 일본 정치를 분석한 논저들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일본 정치에서의 여성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문제의 도립(倒立)현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여성 정치인의 성공사례를 다루는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영은 일본의 젠더정치 연구의 성과이면서, 젠더를 소재로 한 일본의 지방정치 연구의 성과로도 간주될 만한 네 권의 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신기영의 서평을 읽어보면,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우경화’ 프레임은 주류 남성들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젠더정치라는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중앙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여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지방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에 힘입어 ‘아래로부터의 변혁’이 조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우경화’론이 평정한 듯한 일본 정치에 대한 친편일률적 해석은 젠더와 지방에 대한 정당한 관심으로 중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행정학계의 대가인 신도 무네유키(新藤宗幸)의 연구노트,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도 일본 정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글은 2014년 4월 11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일본진단세미나에서 발표한 강연을 기초로 한 것

이다. 신도의 문제의식은 현대 일본 정치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정권과 관료기구의 관계가 2009년과 2012년의 두 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하는 데 있다. 그것은 현대 일본정치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골머리를 앓았을 법한 다음과 같은 용어들, 즉 ‘정치 주도’, ‘관료 주도’, ‘수상 지도’ 등의 용어가 지니는 의미와 내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데 두 번의 정권교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주제 설정이다. 그중에서도 ‘수상 지도체제의 확립’이 보다 직접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신도는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하시모토 행정 개혁 이래의 정치 주도, 수상 주도로의 변화의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때로 그것은 그 용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패하기도 하지만, 일본 정치의 근본적 한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 현실에서 일정 정도 관성이 붙은 변화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에서는 관료에 대한 불신과 적대시로, 아베 정권에서는 정치 임용의 확대로 곡해되어 정치(수상) 주도의 개혁 자체가 실패하거나 관료기구의 사기 저하와 질서 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패전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관료기구의 결함에 손을 대는 관료제 개혁만이 진정한 정치 주도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신도의 주장에서는 아베 정권 성패의 또 다른 열쇠가 관료제 개혁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논단으로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 Yoko Tawada)에 대한 최윤영의 연구를 한 편 신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실시하는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 연구에서 최윤영은 재독 일본인 작가 다와다의 글쓰기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다와다는 일본에서 태어나 러시아문학을 전공하고 스위스에서 독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독일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이중언어 작가’다. 최윤영은 다와다의 텍스트 『오비드를 위한 마약』, 『벌거벗은 눈』, 『보르도의 매제』를 대상으로 “탈경계적, 탈언어적, 탈신화적 사고와 글쓰기를 주제화”하고 있다. 최윤영에 따르면 다와다는 “일본 문학과 유럽 문학의 전통을 혼합시키고 이를 낯선 외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중심의 확고함과 경계의 분명함

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인데 그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세계화’ 시대 지구정치학의 주요 관심사인 월경(越境)과 정체성 정치 등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다와다 문학이 보여주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민족 문화 간의 충돌과 갈등, 언어, 경계, 몸, 젠더의 문제들은 혼종성과 경계성의 문제를 주제화하여 현대성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유와 글쓰기로써 시사점이 크다. “망각은 거꾸로 가장 핵심적인 기억을 불러온다”는 최윤영의 마지막 문장은 이번 호가 한일 수교 50년 특집호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이 망각을 시도하는 역사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역사이다.

7.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한일 관계를 ‘열탕 온탕 반복운동’으로 묘사하곤 한다. 그런데 열·온탕을 오가는 간극은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한일 관계는 현재 열그릴환각(thermal grill illusion)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열그릴환각이란, 사람의 감각 중에서 온점과 냉점이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다.¹⁴ 열냉코일(hot cold coil)이라는 장치로 이 현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로 놓인 긴 원통 막대기에 한쪽으로부터는 섭씨 40도의 열 코일을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섭씨 20도의 냉 코일을 감아오면서 중간 부분에서는 열 코일과 냉 코일을 교차로 엇갈리게 감은 것이다. 사람은 열 코일만 감긴 부분을 잡으면 온점이 반응하며 따뜻함을 느끼고, 냉 코일만 감긴 부분을 잡으면 냉점이 반응해서 차가움을 느끼는데, 두 개의 코일이 엇갈리게 감긴 가운데 부분을 잡으면 아픔을 느끼면서 화들짝 놀라게 된다. 이는 통

14 “Thermal grill illusio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Thermal_grill_illusion(최종 검색일: 2015. 2. 1).

상의 감각기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감각이 혼란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해석과 이상을 감지한 감각기능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인인 통증으로 치환해서 뇌에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픔으로 뭉뚱그려 인지하는 감각. 한일 관계가 바로 이러한 열그릴환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아픔으로 인지된 사물은 회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사람은 노예가 되고 만다.

‘국제법 위에 국민감정법이 있다’는 말이 한일 관계에서는 종종 튀어나 오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역사적 근거에 더해 한일 관계에 품는 국민 정서에 배려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혐한류』(嫌韓流) 식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국민 감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선 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베 총리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일본의 국민 감정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한일 관계에서 감정은 외교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한일 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인 모양이다. ‘감정’(emotion)을 ‘자연과 세계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한 『감정의 지정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¹⁵ 이를 저술한 모이시는 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약간의 굴욕이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이긴 하지만 ‘굴욕감이 커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¹⁶ 모이시는 일본에 대해서는 희망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모이시가 이 책을 저술한 동기는 탈냉전 조정기 이후 국제 정치의 주요 갈등이 굴욕과 공포가 만나는 전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경고하고자 한 데 있었다.

15 도미니크 모이시, 『감정의 지정학: 공포의 서양, 굴욕의 이슬람, 희망의 아시아』, 유경희 옮김, 랜덤하우스, 2010, 14~15쪽(「서문」).

16 도미니크 모이시, 『감정의 지정학』, 6~7쪽(「한국어판 서문」).

증오와 호의가 노예의 심성이며, 그로부터 한 국가의 외교를 해방시킬 것을 역설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었다. 그리고 이를 민주주의 외교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로 주목한 사람은, 한 국가에 대한 훌륭한 지역 연구서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지침의 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었다.¹⁷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한 워싱턴의 연설문은 다음과 같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증오나 호감의 감정에 빠지는 나라는 어느 정도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자신의 증오나 애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감정 가운데 어느 것도 그 나라의 임무나 이 해관계에서 벗어나 나가도록 하기에 족합니다.”¹⁸ 아래에 워싱턴의 고별연설을 조금 더 인용해 보고자 한다.

외세의 은밀한 책동에 대항하여 자유 국민의 경계심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략) 그러나 그러한 경계심이 쓸모가 있으려면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세에 대한 방벽이 아니라, 피해야 할 바로 그 외세의 노리개가 됩니다. 어느 한 외국에 대한 편파적인 호감과 다른 어느 외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는 오직 한쪽의 위험만을 보게 하고, 다른 쪽에 대한 교묘한 영향력을 은폐하고 옹호하는 구실을 주게 됩니다. 외국의 노리개가 되어 버린 자들이 민중의 갈채와 신임을 찬탈하려다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동안, 편파주의자들이 불러들이는 음모에 저항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의심과 미움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¹⁹

워싱턴의 고별연설 가운데 이 부분은 미국 국민의 열정적인 프랑스 편애와 영국 혐오 사이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것을 호소하고 유럽 정치에 대한 불개입주의를 천명한 것이긴 하지만, 프랑스인(임에도!) 토크빌은 워싱턴의

17 토크빌은 워싱턴이 제시한 미국 외교의 일반 원칙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 임효선 옮김, 한길사, 2002, 305~310쪽.

18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 307쪽.

19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1796,” *The Avalon Project: Documents in Law*, http://avalon.law.yale.edu/18th_century/washing.asp (최종 검색일: 2015. 2. 1).

신중함이 미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며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동포 시민들의 애정을 거의 잃을 뻔’ 했음에도 워싱턴은 민주정치에서 “충동을 따르고 순간적인 열정을 만족시키고자” 완숙한 계획을 포기하는 성향에 감연히 맞서서 조국을 위기로부터 구했던 것이다.²⁰ 토크빌은 워싱턴을 인용하여 민주주의 외교가 경계해야 할 ‘국민감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의 권두언을 토크빌의 ‘워싱턴론’으로 마무리하는 뜬금없음을 독자 여러분은 부디 이해해 주시길 빈다.

8.

2014년 12월 『일본비평』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알찬 원고들로 등재후보지 선정에 힘을 실어주신 모든 집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일본비평』 편집위원 일동은 『일본비평』이 한국의 일본 연구를 선도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연구자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 309쪽.